

# 보 도 자 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김정동 연대기획국장, 010-3471-7468, 042-331-0092)

제 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해결을 위한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질의결과”

##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해결에 대한

##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질의 결과 -

“이재명, 문제해결에 나서겠다”

“문재인, 특정이슈 찬반여부를 묻는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다”

“안희정, 최성, 무응답”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9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대전 경선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에 대해 각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현황을 알리고 도시공원 관리와 보존은 국가에 책임이 있는만큼 제도 정비나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월평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및 검증과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문제해결을 위해 법개정, 대책연구, 예산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특정이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밝혔고 안희정, 최성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대전 뿐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의 문제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을 단순한 찬반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올바른 대선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특히 별도로 후보의 의견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했음에도 의견이 없다는 것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바쁜 일정이겠지만 경선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 답변조차 못하겠다는 최성, 안희정 후보 역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단순히 대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문제다.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한만큼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해결이 대선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3. 28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별첨.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질의서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질의서

##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성 명 : 000 예비후보

소 속 : 더불어민주당

※ 본 질의서 내용에 대한 예비후보님의 답변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개요와 문제>

#### 1. 민간공원 특례사업 배경

- 1999년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약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4조는 헌법의 재산보장권, 정당보상원칙에 위반된다는 민원인 청구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헌법 불일치 판결

-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일부 개정.

: 20년 경과한 장기 미집행공원시설에 대해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5년 1월 20일)

: 법 21조의 2 제1항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주요내용

/ 사업시행 방식 : 제안 또는 공모

/ 대상 공원면적 : 공원면적 5만㎡ 이상

/ 사업비 현금예치 : 부지매입비의 4/5이상

/ 시설규모 : 공원시설 70%이상, 비공원시설(상업시설) 30%미만

#### 2. 대전시 민간공원특례사업 현황

- 현재 대전지역 도시공원 : 602개소, 2477만4000㎡

- 공원미조성 : 216개소, 1150만6000㎡

- 2015년 말 기준, 도시계획시설 중 5만㎡이상 공원으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공원 : 21개소, 1392만2019㎡ (사유지 73%, 1018만2000㎡)
-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인 곳 : 4개 공원, 5개 지구 220만7150㎡
  - +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113만3311㎡
  - + 월평공원 정림지구 33만8771㎡
  - + 용전근린공원 17만2961㎡
  - + 매봉근린공원 36만 776㎡
  - + 문화공원 18만8500㎡

### 3.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

- 위 치 : 서구 갈마동 산 2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2019년
- 규 모 : 1,133,311㎡ / 월평근린공원 전체면적(3,994,734㎡)의 28.4%
- 사 업 비 : 8,053억원 (토지매입 1,204 공원시설 350 비공원시설 6,499)
- 대표제안자: 아이피씨자산관리(주) 대표 장동주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 사업내용
  - + 비공원시설 : 165,406㎡(사유지의 28.28%)/ 공동주택 3,024세대
  - + 공원시설 : 967,905㎡(사유지의 71.62%)/ 도서관, 생태숲, 치유센터, 산책로 등
- 추진내용
  - ‘15. 10. 30.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 ‘15. 11. 27. 사업설명회 개최 /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 ‘15. 12. 24.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16. 2. 11. 제안 수용 통보
  - ‘16. 5. 10.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타당성 검증 용역 계약
  - ‘16. 5. 3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16. 12. 27.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람
  - ‘17. 2. 2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변경) 입안서 제출
- 향후추진과정
  - ‘17. 3. 환경·재해·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 ‘17. 4.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따른 주민 공청회 개최 예정
  - ‘17. 5.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7. 7. 협약체결 및 공원조성계획결정
  - ‘19. 12. 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 4.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문제점

### 1) 추진과정의 문제

- 2000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 지난 16년간 아무런 대책없이 해제 시점을 불과 몇 년 앞두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민간업자의 손에 대전시민들의 쉼터, 대전의 미래자산을 내맡기려 하고 있음.
- 민간특례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사업과 관련해 2015년 10월 30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고 불과 3개월만인 2016년 2월 11일 사업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는데 검토기간 소통부재
- + 지역주민은 물론 대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임에도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없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은 180일.

### 2) 특혜논란 :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으로?

- 7개 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방식 현황을 보면 총 25건의 대상사업 중 특례사업 추진방식으로 16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9개의 사업은 계획 및 검토단계
- 인천과 대전만 특례사업 추진
- 인천 10개 중 6개 우선제안자 방식, 4건 다수제안 방식
- 대전만 5건 모두 우선제안 방식으로 추진
- 최근 대전시는 다수제안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함

### 3)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단 한차례만 공고한 후 제3자의 사업제안이 없으면 사업비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그대로 협상대상자로 선정
-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하려면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 없음
- 정보 비공개
- 민간투자사업 계획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사업 시행 시 공사비 검증 및 부당이익 환수 등 필요

### 4) 환경파괴 논란

- 민간특례사업으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만 3024세대의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머지 4개 특례사업지역까지 합하면 총 73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이것은 난개발

방지가 아닌 난개발 유도사업일 뿐.

- 월평공원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을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멸종위기종 맹꽂이, 흰목물떼새 등 다수의 법적보호종 및 야생동식물들의 서식하고 있어 도심내 공원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태적 가치가 높음.
- 월평공원은 도심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이산화 질소, 온실가스 저감 등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음.

#### 5)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 야기

- 3천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시 인근 계룡로와 대덕대로에 4500여 대의 신규 교통량이 늘어 남에 따라 교통대란 예상
- 건설예정지 진입로는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로 교통사고, 비산먼지 등 학생피해 우려
- 대전은 동서격차 해결이 중요한 문제로 권선택 시장 역시 후보시절 서구, 유성구 개발억제를 약속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또 다른 대규모 아파트 건설시 도심균형발전에 심각한 문제 야기.

이에 시민대책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000 예비후보께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분	정책내용	예	아니 오	의견
1.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진행하여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시겠습니까?			
2.	일몰제에 대한 전국 도시근린공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의 개정, 대책연구, 국가도시공원제를 통한 예산 지원 등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총 22개 단체>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국장 042-331-0092